우리민족의 '근대인쇄' 시기를 따지자면 해방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방 이전에는 근대식 인쇄가 별로 없었고 그나마 일제가 운영하던 인쇄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의 인쇄역사 기록을 찾자면 1954년에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발행되고 있는 인쇄신문이 유일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역사를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쇄역사를 월별로 정리해 시리즈로 보도한다. 이번 호에는 1954년 이후 매년 4월에 보도되었거나 광고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 인문계고교 2종교과서 검정신청 경쟁률 치열

1978일 4월15일자 인쇄문화시보는 1979학년도부터 사용될 인문계고교 2종교과용원서(검인정교과서)의 검정신청을 접수마감한 결과, 평균 3.3: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사용예정 책 수는 1백2책이었으며 24개 과목에 모두 3백32책이 접수됐다. 당시 문교부(현 교육부)에 의하면 새 교과서 정책에 따른 교과서개편을 위한 2종원서 검정신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과목은 한문II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3책 합격예정에 18책이 신청, 6: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한문 I 은 5책 예정에 25책이 출원되어 5: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영어 I · II는 모두 5책 예정에 24책이 각각 신청되었고(4.8대1), 수학 I · II는 모두 5책 예정에 19책, 18책이 각각 신청되어 3.9:1의 경쟁률을 보였다. 문교부는 같은 해 4월 중에 과목당 5개의 심사위원을 선정, 5월까지 비공개 심사를 거쳐 6월초에 1차 합격 책종을 발표하고 수정 · 보완 지시를 거쳐 8월 초에 최종합격 책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기준은 1977년 7월에 발표한 바 있는 '집필상의 유의점' 을 중심으로 평점을 합산, 최다득점 순위별로 교과목 3~5권씩을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2종교과용원서는 1977년 검인정교과서 부정사건 여파로 전면개편하게 된 교과서중 이른바 검인정에 해당하는 교과서들이었다. 검정에 통과될 경우 5년간 발행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그동안 업자들간에 경쟁이 매우 치열했었다고.

시보는 신청된 책들이 권당 최하 약3백만원(한문)부터 최고 약3천만원(사회과부도)의 제작비를 들여 집필 인쇄된 것인데 심사가 끝나면 2백30책 정도가 탈락됨에 따라 지도서를 포함해 책당 평균 5백만원씩을 투입했던 출판사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인쇄기술상담실 설치

1972년 4월1일자 인쇄문화시보는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정부의 과학기술 진흥정책에 호응하고 업계기술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쇄기술상담실을 설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보는 기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나라의 인쇄기술은 지난 10여 년 동안 눈부시게 발전해 왔지만 아직 인쇄 선진국에 비해 기술수준이 크게 뒤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업계에 기술연구기관이 없어 기술발전에 적지 않은 지장이 있었다며 연합회에서 상설기구로 인쇄기술상담실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 업계기술발전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상담실은 인쇄전과정의 기술상담, 인쇄용 원부자재사용에 관한 상담, 기술원서 구입 및 업체내 기능공 재훈련에 관한 상담, 인쇄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의견 수렴 등을 담당할 방침이었다. 시보는 이 상담실이 질의내용을 접수한 후 검토, 분석하여 공정별로 세분하고 국내우수업체의 분야별 실무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 질의에 회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설적인 건의사항은 사업에 반영하여 실행하고, 기타 운영사항은 업계전문가와 협의, 점차적으로 보완, 개선하여 명실상부한 기술상담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 무허가 배출시설 강력규제

환경처의 고발로 인쇄업체들이 사업에 지장을 겪었던 시절이 있었다.

1991년 4월12일자 인쇄신문은 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과 관련한 환경처의 고발로 몇몇 인쇄사들에 대한 구제가 어려울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는 서울특별시와 환경처가 같은 해 3월 말에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보낸 회신에서 상공부 고시 제 90-33호와 관련하여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행위는 환경보전법상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대상이므로 공장등록을 해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3년후 이전조건부등록이라도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방지시설의 설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입지관계 법령에 저촉된다면 그 장애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 같은 해석에 대해 당시 인쇄신문은 환경처에 의

해 고발조치된 몇몇 인쇄사들이 공장을 폐쇄할 입장에 처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기 전인 1991년 3월12일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환경처장관, 서울특별시장에게 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과 관련된 건의서를 각각 보냈었다. 이 건의서는 "1990년 상공부 고시 제 90-33호에 의거 공장등록을 권장하는 정부시책에 따라 상당수의 조합원이 1993년 11월30일까지 공장이전 및 현공장 폐쇄와 환경보전법 저촉사항 개선을 조건부로 등록을 필하고 사업영위를 위해 공해방지 시설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을 하기 위한 건물용도 변경을 신청한 결과, 서울지역은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불가조치가 내려졌을 뿐만 아니라 환경처의 고발조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 기능인력 부족해결 위해 제도적 지원 절실

기능인력 부족은 십수년 전에도 인쇄업계가 겪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였던듯 싶다.

1991년 4월12일자 인쇄신문은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인쇄기능 인력부족과 관련해 ▲사업내 직업훈련 비율조정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원 인쇄과 및 인쇄업종 확대에 관한 건의서를 상공부, 노동부, 교육부 등에 보내고 인쇄기능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인쇄업합회는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원 인쇄과 및 인쇄업종확대' 건의서 제출을 통해 제반 시책의 미비로 노동집약적인 인쇄업계의 매년 고용증대가 평년 5.18% 추세로 이를 보충할 배출교육기관 및 훈련원의 경우, 연간 1천3백여명의 인력부족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학 및 전문대의 이공계열 확대, 인문고등의 공업고등전환 및 각종 기능공 훈련원 증설과 확대에 대한 정부시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인쇄문화 육성을 위한 인쇄과 및 인쇄공양성 증목이 없어 부족인력을 보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쇄연합회는 인쇄과가 있는 교육기관의 학급증설 확대와 함께 공공직업훈련원에 인쇄업종을 신설 또는 확대 배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주간신문 전문인쇄업체 경영난

1995년 4월7일자 인쇄신문은 언론자유화조치이후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주간신문 전문인쇄사들이 경영악화와 연쇄부도 등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상업인쇄를 겸하는 인쇄사를 제외한 신문전문인쇄사는 서울지역에 14~15여개 업체로 주로 마포 영등포 성수 용산 을지로 등지에 집중돼 있던 상태. 인쇄신문은 이 같은 경영난이 ▲주간신문사들의 잦은 폐간 ▲신문용지 품귀로 인한 작업중지 ▲인건비, 공장임대료 등의 상승으로 인한 적자운영 ▲ 일간신문사와 윤전기를 도입한 생활정보지 회사 등의 외주침식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밖에 일간신문사들의 외주확대로 점차 일감이 사라져가고 있고 윤전기를 도입한 생활정보지까지 가세하고 있는 점도 주간신문인쇄물 수주시장이 고갈되는 원인으로 꼽혔다.

당시 신문업계의 관련자료에 나타난 폐간현황을 보면 1994년 한해 동안 총 357개 업체가 자진폐간해 사상 최고의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인쇄신문은 신문전문인쇄사들이 신문인쇄를 하고도 대금결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전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간자들의 무한증면경쟁에 따른 용지품귀 난으로 그나마 겨우 확보된 수주물량도 인쇄를 못하게 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던 것. 당시 제지업계에 따르면 신문용지의 하루 국내 총 생산량은 25만톤이었지만 국내 일간 신문용지사 용량은 30만톤에 육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여파로 K인쇄사는 1994년 8월 부도를 내고 타회사로 경영권을 넘겼지만 결국 세차례에 걸쳐 부도를 냈으며 D인쇄사의 경우 더 이상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해 윤전기를 H일간경제신문사에 넘기는 등 주간신문 전문인쇄업체의 피해가 속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